휠체어 등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편리해진다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무능력 상실·안전운항 능력 미달 항공사 면허 취소

앞으로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다.

공항,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비행기 탑승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등을 이용한 안전정보를 맞춤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4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으면 2020년 1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1

"장애인권리와 생존권 3대 법안 통과시켜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년 장애인생존권 3대법안 '제발(Please)' 통과 및 보건복지상임위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원들은 이날 장애인권리와 생존권이 걸린 3대 법안 통과(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를 촉구했다.

완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5대 설치 완료

완도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사회활동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5대를 설치했다.

급속 충전기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 빈도가 높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총연합회, 완도읍사무소, 신지면사무소, 고금면사무소에 총 1,1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11월말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배터리 2대를 동시에 30분 내외에서 급속충전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바퀴에 공기 주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모든 종류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다 나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신안군 암태면, 불우가정 김장 담가주기 행사 성료

신안군 암태면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문득)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관내 불우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암태면 여성단체협의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매년 김장나누기 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도 직접 담은 1300포기의 김장김치를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경로당 등 어려운 이웃 280여 세대에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암태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함으로써 훈훈한 정을 느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주시,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사 채용…지자체 중 처음

전북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를 채용했다.

전주시는 수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를 채용해 장애인 특화도서관인 평화도서관에 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첫 출근을 한 통역사는 청각장애인들의 독서능력 배양을 위해 △농아인 책(수어영상도서 등) 읽어주기 △한글 및 수어교육 △문자도서 낭독하기 △감상문 작성 독후활동 진행 △독서프로그램 운영 △수어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생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전국에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 3년…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참여율 저조·교육 내용 등 문제점 제기

"교육 내용 개정 및 강사 역량강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에서 실시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진행할 기관담당자를 위한 운영교재를 개발해왔다.

인권위가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적 자료를 통해 기관별 실적현황, 강의시간, 교육방식, 강사소속을 분석한 결과 △집합교육 참석률 저조 △교육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내용 △일회적이고 획일적 교육운영 △자질부족 강사에 의한 교육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권위는 개선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실시 여부 포함 △집합교육시간 최저기준 설정 △교육내용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강사 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교육 실시기관용 운영교재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교육과정의 계획, 준비, 운영, 결과정리 및 보고, 평가 등의 내용과 정보를 담았다.